



## 세무·회계·경영(TAM) 쟁점뉴스 요약

### 약국·헬스장 등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한다

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가전제품 소매업,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,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, 컴퓨터학원, 기타 교육기관, 체력단련시설 운영업, 묘지분양 및 관리업,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19일 밝혔다.

이에 따라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69개에서 7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.

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약 8만 5000명이지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보다 많은 사업자가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할 수 있다.

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지난 7월9일 국세청이 개통한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거부하면 해당 거래대금의 20%를 가산세로 부과한다. 또한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하더라도,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.

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, 전화,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%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.

### 싱가포르·체코 진출하는 韓기업 세 부담 줄어든다

싱가포르와 체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.

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5월과 지난해 1월 서명한 한-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, 한-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연내 발효된다.

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하는 조세와 그 밖의 조세에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적용된다.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 간 과세권을 조정해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.

우선 싱가포르에서 건설기업이 영업할 때 현지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 기간이 '영업 6개월 이내'에서 '12개월 이내'로 늘어난다. 소득 발

생 원천지국의 사용료 소득 최고세율도 15%에서 5%로 낮아진다.

지분을 25%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주식 양도차익은 거주지국(대주주 주식 양도차익은 원천지국 과세)이 과세한다.

체코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최고세율은 5%로 단일세율이 적용되고, 이자소득 최고세율은 10%에서 5%로 내려간다.

정부는 "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"이라고 했다.

###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

19일 정부가 발표한 '2020년 경제정책방향'에는 경제혁신에 밑거름 역할을 할 각종 조세지원정책이 포함됐다.

우선 국내여행 숙박비용이 신용카드(체크·현금 포함)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. 도서·공연비에 대해 100만원을 추가 공제(공제율 30%) 받을 수 있는데, 이 한도에 숙박비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.

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이루어진다. 생산성향상시설 대상에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가 추가되고,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2% (현행 1%), 중견 5%(3%), 중소기업 10%(7%)로 각각 올랐다. 대기업은 1년간 중견·중소기업은 2년간 한시적으로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.

생산성향상시설·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은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.

올해 말 종료되는 생산성향상·에너지절약 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 기간은 6개월 더 연장하고, 중소·중견기업 가속상각 허용한도도 한시적으로 75%로 상향한다. 가속상각은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속도를 빠르게 해 투자 초기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.

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접대비 손금(필요경비) 산업 한도 또한 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늘어난다. 수입금액별 한도도 100억원 이하인 경우 0.2%에서 0.3%, 100~500억원은 0.1에서 0.2%로 오른다.

내국법인이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외국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금액의 5%의 세액을 공제한다.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일 경우에는 7%, 중소기업의 경우 10%로 더 높은 세액 공제율을 적용한다.